

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7 호

국회 사무처

2017년9월13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1. 경제에 관한 질문 1

(14시0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제에 관한 질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관이 공식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노동 없는 불로소득 그리고 자산 세습의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존을 지키지 못하는 계층이 급속히 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과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공동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됐지만 책임자 하나 없는 해외자원 개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1000페이지에 달하는 국정과제보고서에조차 자원 개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급히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부가 새 나가고 있고 자원기업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50여 일 지났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동안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보고받았습니다.

○**홍영표 의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해외자원 개발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해외자원 개발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방 이후에 44조를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33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조가 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 3사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린 것은 13조이고 그 외에도 손상차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 6조 정도, 그래서 본 의원은 약 20조 정도가 이미 손실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석유공사는 부실의 규모가 11조 6000억입니다.

장관님, 대우조선 7조 적자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홍영표 의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해외자원 개발한다고 석유공사의 지난 5년 동안 적자가 무려 11조 600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입니다. 부채가 5조입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2조를 더 투입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국민의 세금을 2조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실의 규모가 큰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멕시코에 볼레오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에 원래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하기로 한 돈은 1500억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조 6000억을 집어넣었습니다. 2014년에 공장을 완공했는데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이 회사는 현지 운영사의 회계와 재무의 불투명이나 부정

비리 때문에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 기술 기업에서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채광성이 없다.” 이런 국제 전문기관에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릅쓰고 광물자원공사가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손해난 게 1조 6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청산을 해도 손해 남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다가스카르에 니켈 광산이 있습니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 저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여기는 투자비를 2900억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2조를 투자했는데 지금도 적자입니다.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노동자들 점심을 하루에 6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7000원이 넘는 돈을 청구한 바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지요. 지금 국회 직원식당이 33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돈을 집어넣고 지금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는 2조에 대해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스공사를 보면요 캐나다의 혼리버·웨스트컷뱅크라는 유전을 샀는데 이게 바로 8000억 손실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GLNG 가스사업에서는 7000억, 총 2조 손실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큰 덩어리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33조 투자의 내역을 제대로 정부든 감사원이든 국회든 단 한번도 들여다본 적 없고, 오늘 이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대로 넘어갈 겁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실체적 진실, 이 부실의 규모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실과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폐 축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부가 그랬습니다. 2014년 국감 때 저희들이 국회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추적을 해서 이 부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윤상직 산자부장관, 이분께서 “내가 미국 회계사다. 삼정KPMG 자문을 받았다.”…… 공인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기다리면 30

조를 회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 이후로 지금 돈을 벌기는커녕 9조를 더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산업부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왔습니다. 거기다가요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가 100% 성공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100년 된 그런 자원회사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원 공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 수익률, IRR 이런 기준을 세워서 10% 미만이면 투자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하베스트 수익률이…… 하베스트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원 정도 돈을 날린 이 투자를 이것을 조작해서 투자를 합니다.

가스공사도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또 조작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볼레오 사업도 IRR이 8%가 되어야 하는데 5.3%인 것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1조 6000억 손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자원 3사, 특히 산업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자원 가격이 상승하면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 니켈을 비롯한 국제 광물자원 가격들이 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처벌도 못 했습니다. 감사원 실무자들이 감사원 상부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의 하베스트 투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석유공사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현지에 인수단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이 이것을 계약하러 갑니다. 계약하러 가는데, 현지에서 갑자기 끼워 팔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공사 사장이 돌아옵니다, 그 인수팀을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공항에 내리기 3시간 전에 최경환 당시 장관이 공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석유공사 사장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장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투자하지 말고 철수하라는 그 결정을 번복하고 투자를 추진해서 6조의 손실을 봤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검찰에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과거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셰일가스와 같은 새로운 자원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셰일가스에 대한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전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가스 공기업들이 좀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외형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투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자원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의 컨트랙트를 맺었을 때 기술적인 그런 감각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주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취임한 지 50일밖에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원 개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정조사 하고 감사원 감사 다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 조사한 거예요,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자, 잘 경청하시고……

○홍영표 의원 20조 원이나 되는 혈세를 탕진하고도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국회에서 조사를 하려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은폐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간을 지키라고, 시간을!」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제라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들을 문제인 정부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장 정세균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잠깐만……

의원님 여러분,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시간을 좀 잘 지키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석에 앉으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국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나토의회연맹 대표단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쪽의 의원님들이신데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현 대통령의 원전 관련 연설을 한번 영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회법상 이 음향을 직접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내용을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방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전의 세계적인 안전성과 세계가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수준과 안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저 연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그 당시에 해안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께서는 이 산업 현장, 고리 현장이나 지금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좀 둘러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의 고향에 원전이 여섯 기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아니, 영광군 말고 신고리 현장이나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업체 방문 한번 해 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 볼 예정입니다마는 제가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기를 고

려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저는 한 3개월 정도 신·재생에너지 현장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을 다 둘러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채익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연설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 설계수명 연장 금지, 이것을 똑같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으로 구체화되려면…… 몇 개월 이내에 나오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만 그러한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좀……

2~3개월 안에 그 계획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탈원전, 탈석탄, 이게 다 공약으로……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이……

○이채익 의원 5·6호기도 공약을 했으니까 중단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이라면, 임기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를 좀 더 확충해 나가자, 그 정도가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채익 의원 에너지는 백년지대계인데 5년 정권이 뭐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렇지요?

신고리 5·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요.

○이채익 의원 아니, 그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인정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채익 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채익 의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해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았 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이채익 의원** 좀 제발 자가당착, 자기부정 이 렁게 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있는 사실 중에 그 전 체를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자가당착이……

○**이채익 의원** 아니,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계획 하고……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제가 부정한 바가 없 습니다.

○**이채익 의원** 노무현 정부 때 부지 매입했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다는 말이에 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을 드릴까요?

○**이채익 의원** 조용히 해요!
(장내 소란)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정지로 결정 나면 배·보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아니, 일반 시중의 배추장수도 계획이 있는데 3조 가까이 되는 배·보상 문제를 가정을 해서 답변을 못 한다……

○**국무총리 이낙연** 어느 경우든 당연히 정부의 책무는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현 단계에서 어느 경 우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도대체 이 얘기를 듣는 국민들 이, 단돈 1억이 드는 부분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3조 가까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 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채익 의원**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 문하면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이채익 의원** 기 허가된 추가 원전 여섯 기도 백지화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미 진행되고 있는 3개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3개 정도가 아니 지요. 그다음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중지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것 중지하면 매몰비하고 배·보상은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매몰비용 문제는 거기에 따 라서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입니다.

○**이채익 의원** 무슨 법으로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나중에 충분한……

○**이채익 의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사가 시작되지도……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보고가 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추궁을 당하고 있지 않습 니까.

○**이채익 의원** 정책을 수정할 때 보고를 하셨느 냐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연내에 나오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연히 국회에 보고될 것 입니다.

○**이채익 의원** 기 허가된 신규석탄발전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서천을 포함해서 매몰비가 한 2조 8000 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배·보상 할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은 강제하고 있지 않습 니다.

○**이채익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니까 이 정부가 거짓말한 다 는 말이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 지금 업계에서는 LNG로 전환하

라, 그렇게 정부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종적인 판단은 민간의 발전업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신서천은 민간 발전이 아닌데 그 부분은 또 배·보상을……

○국무총리 이낙연 공기업이지요.

○이채익 의원 그것은 배·보상을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께서 현장 행정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해안가에 지어야 할 석탄발전을 다 허가해 놓고……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야 할 LNG발전은 석탄발전으로 바꿨을 때 경제성과 거기에 과연 입지조건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민간 발전업자가 충분히 판단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채익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채익 의원 국회에 보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당연히 토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채익 의원 그런데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에 적당한 시기에 늘 보고가 될 것이고요. 보고하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가만 봐두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5·6호기 국회에 보고 안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5·6호기는 지금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지요, 추궁당하고.

○이채익 의원 사패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피해 규모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습니까? 사패산 터널공사 저것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하고 또 공론화해서 무려 예산을 5500억 날렸습니다. 제가 바로 경부고속철 정족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롱뇽 때문에 공사가 1년 넘게 중

단되어서 2조 5000억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은 말쑥하게 처리된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비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저는 요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이런 정치 꼭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

○이채익 의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탈원전 정책은 6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이채익 의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여당입니다.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패산 터널 그것 공사 안 해서 될 일입니까? 결국에는 해서 돈만 날리고 갈등만 유발하고, 정족산 도롱뇽 때문에 지을 스님 설득시키는 데 1년 5개월 걸려서 결국에는 예산 낭비하고……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절차가 갈등을 유발하기……

○이채익 의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절차가 갈등을 유발하기 전에 이미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걸렸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채익 의원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관련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상업운전 허가를 안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부러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채익 의원 지금 업계에서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동될 것으로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지금 공정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 이후에 상업운전을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임기 내에 가동되는 것으로 이

미 계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채익 의원**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협조할 부분은 야당에게 협조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실험 정권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에게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탈원전은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체에너지원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정도인데 현재의 전망으로는 원전 의존율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전 의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나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정책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조심히 다뤄 가고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기왕의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자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원전 관련 과학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채익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러 가지…… 몇 분 만나 봐었고요, 그분들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채익 의원**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정신이 좀 한마디로 나간 사람들 아닌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원전을 없앤다, 뭇 때문에 없애느냐…… 원전과 지진이 어떻게 맞는가, 원전의 안전성이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제압할 수 없는가, 다수호기와 원전의 안전성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국무총리 이낙연** 원전과 지진이……

○**이채익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이낙연** 원전과 지진이 무관하다고 생각……

○**이채익 의원**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채익 의원** 이제 좀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총리는 좀 더 겸손한, 남의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를 참 존경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국회에서도 쟁쟁한 정치인이었고 또 민선 지사까지 하시고 정말 열린 사고를 가진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별 예고도 없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했을 때 흔쾌히 40분 가까이 할애해 주시는 모습에 사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해체해도 되지. 우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얼마나 점잖은 정부입니까? 우리 칭찬받아야 될 정부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채익 의원** 예? 워딩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그런 방식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여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여론을 의식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대사를 갖고 왜 여론정치를 합니까? 이 정부가 원전 정책을 갖고 국민참여단 500명을 했는데 그러면 왜 신·재생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재생 정책도 500명 물어보아야 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답변 드릴까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갈등이 표출되어서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부닥치거나 그런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채익 의원**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향후 60년 원전 가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어떻게 하면 사용후핵연료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연 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해서 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곧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저는 북핵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남한의 경제적 사용을 핵발전소로 얘기하는 모습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원전을 핵발전소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장 문제는 구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이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R&D는 예산을 더욱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말살 정책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원전 2기가 영국에서 수주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충정을 십분 수용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혁신과 경제체질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해고되거나 가게 문을 닫으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저복지 수준입니다. 국민의 삶이 불안한 이유이고 경제의 구조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과거식 성장엔진에 집착하고 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퍼주기로 규정하는 낡은 보수의 발상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반면 창의를 쫓고 피우고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가꾸기엔커녕 더 관치적인 발상에 얽매이고 성장론을 분배론으로 덮어 버리고 조세, 일자리 등 경제정책마다 표 계산과 정치공학을 앞세우는 낡은 진보의 발상으로도 결코 유능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부총리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축에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성장이 필요하고 그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경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제 질문은 소득 주도 성장론만 가지고 안 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구조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 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소득 주도 성장론의 바탕이 되었던 ILO 논문의 논거는 뭐였습니까? 임금 주도 성장론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 플러스 포용적 성장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 논문에도 보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합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부합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은 저희가 우리 경제에……

○김성식 의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우리 경제구조나 사회구조로 보았을 적에, 또 소규모 개방경제의 측면을 봤을 적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식 의원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도 여기에 많이 믹스돼 있는데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단기적인 경기대책, 불황 탈출책 이런 것이지 성장론은 아니라는 이른바 정리된 의견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케인즈가 애

기하는 수요 진작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 성장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경기 대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혁신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식 의원** 며칠 전 벤처기업 방문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난주 금요일 날 갔습니다.

○**김성식 의원**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구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혁신 성장 측면에서 창의와 혁신을 꽃피우는 측면을 같이 강조하고 싶어서 현장을……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보고 혁신 성장에는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가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것 보다는 지금 두 가지 축을 저희가 다 강조하고 있고 균형 잡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의 소득 주도 쪽이 조금 많은 메시지가 나가서 시장과 기업 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균형 잡히게 저희 정부가 이런 측면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방문 이벤트 말고 그런 문제를, 정부부처 간의 체계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저희가 그 구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경제장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주재하면서 혁신 성장을 위한 네 가지 축 얘기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 시장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틀을 경제장관회의나 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런 정

도의 기조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여기에다가 무슨 소득 주도니 투자주도니 이렇게 갖다붙이면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한 것이지요. 특정 성장론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도그마에 빠지게 되고 정책들을 편식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혁신 성장도 강조하고 있고 그 바탕으로 공정경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성장은 결국 제도개선, 기술혁신, 인적자본 확충, 경쟁정책, 구조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동시에 소득 주도 성장론 자체는 입론의 근거나 연계고리는 사실 취약해요. 그러나 그 문제 제기는 정책적 수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도 원활히 되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복지수준, 소득 재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 조합이 좋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에서 단기적으로 그와 같은 일자리나 또는 소득 인상을 통한 내수의 진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인적자원의 질 높은 노동력 또는 보다 많은 경제활동의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측면도 소득 주도 성장에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도그마화하면 정책수단이 제약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조합이 못 이루어진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는 동의합니다.

○**김성식 의원**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 추세, 3년 동안 1만 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금년에 16.4%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

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속도라든지 정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의원** 3년 만에 1만 원, 기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에는 기준이 있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아까 총리께서도 다른 점에서 비슷한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섯 분의 대표께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볼 적에……

○**김성식 의원** 저는 재정 당국 책임자로서 기준을 여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중위소득의 밑으로 50% 정도를 중산층의 하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돈이 1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거기다가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비교적 그런 논리로 하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김성식 의원**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꼭 3년 만에 1만 원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직접지원까지도 정책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그런데 너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영세·중소 상공인도 어려워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래서 초과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3조 재정 투입한다는데, 어려워지는 분을 돕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3조 원 직접지원에 대한 정책 발표는 의원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로 다음날 그것을 발표했는데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

게 나왔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했을 적에 예상될 수 있는 고용의 감소 측면을 정부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와 같은 직접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적절한 시기와 운용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부총리께서는 1년 해 보고 보자는 건데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년……

○**김성식 의원**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1년……

○**김성식 의원** 그다음에 부총리님께 제가 정말로 정색하고 묻습니다.

전달체계 기준, 현장 확인 문제, 자신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저희 TF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의 전달체계가 사실 굉장히 짊어 볼 게 많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거의 해당되는 전 부처가 아주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해 보는 제도고 또 그 전달체계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EITC라든지 국세청을 통해서 한 그쪽 일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연말 안에 준비를 차질 없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영세 사업자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3조를 넣어서요.

그러나 지속할 수도 없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정부가 더 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고요, 의원님.

아까 제가 1년 하고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기보다……

○**김성식 의원** 본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적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원하청 문제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다가 표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 이것을 해결 못 하고 그 직무유기가 민망하니까 투표에 도움이 되고 손쉬운 기류니까 최저임금에 지금 너무나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제정책이 왜곡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답변드릴까요?

○김성식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문제 의식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타협을 이루기에 적절한 쌍방의 포지션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취약계층이나 또는 취약한 노층에 있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통한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서로 간의 양보와 뭐라고 할까요,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반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여 이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인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근로장려금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지만 지원 폭이 좁아요. 10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생애주기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해서 대처하는 것이 서민을 정말 도와주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막 짓발처럼 혼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그 방식도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비정규직이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남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임금격차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를, 또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또 비정규직 측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의원 사유제한 방식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격차를 줄여 가서 사용동기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두 개가 같이 조합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좋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 지금 걱정하다고 보십니까,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조금 과도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연봉형 보수체계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비효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가 더 좋아지고 소외감을 안 느끼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무급 제도의 도입 같은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이 같이 고민돼야 되는데 한쪽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본적으로 동감하고요……

○김성식 의원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이 잘 안 되나 하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표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표가 꺼져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정당 간에 같이 고민을 해 주고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성과와 적정한 보수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와 같은 직무급 내지는 성과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동안 노사 간에 합의나 타협이 결여됐던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김성식 의원** 그러려면 부총리께서도 노동계도 만나시고 설득도 하시고 대통령도 나서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건의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도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회의나 채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소득 주도 성장이 이런 개혁과 연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나은 쪽에 계속해서 소득이 더 가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이 늘지 않고, 대신 또 사람을 안 뽑게 되니까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도 같이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의 메시지가 워낙 그동안에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서 마치 뒷부분을 정부가 간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진짜 서민을 위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해서 피켓처럼 들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하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김성식 의원**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하청 문제 때문에 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법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엄정하게 조사·제재를 하겠다고 그 다음에 하도급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원하청 문제의 불균형,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약자한테 더 많은 부담을 안기는 전가 구조이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이 전가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한국 경제가 고도의 발전을 달성해 오는 과정에서 국내시장이 수요 독점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던 그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산업의 경우에는 한두 개의 기업이 들어가 버리면 그 시장 자체가 포화되는, 따라서 그 산업에서의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하도급 기업에는 거래할 수 있는 대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원천적으로 협상력의 열위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해서 현행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제재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하도급법의 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요. 더 나아가서 너무 상세한 경영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김성식 의원** 그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하도급법의 개정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개정……

○**김성식 의원** 취지는 알겠는데 법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안 생각까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현실적으로 딱딱한 경성법률에 모든 목적을 다 이루려고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담되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성법률 또는 상생협력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김성식 의원** 연성법률 얘기는 국민들이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법이나 시행령처럼 딱 규정화된 하드 로(hard law)—경성법률이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업계에서의 상생협력 모델이나 또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와 같은 모범규준을 통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방식을 연성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김성식 의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딱딱딱 행정조치나 법률로써 임금 격차를 줄여 갈 수가 없어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

통령부터, 내각부터, 우리 국회 모두가 서로 힘센 쪽에서 양보를 구해 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노사관계 문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이지만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간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득권을 일정 정도 양보하는 타협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과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인 정부가 하셔야 됩니다.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소 주장해 온 김 위원장께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업무에, 직무에 충실하는 한편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공정거래 문제를 보면 전통적인 공급독점 말고 원청의 수요독점 그다음에 인터넷·모바일과 같은 연결망 독점,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들을 아주 힘들게 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사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문제는 그 자체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경쟁당국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나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지식산업 전담부서를 만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접근하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쟁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혁신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것이 인접시장의,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이 문제는 신산업정책과 또 스타트업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식 의원** 기업도 노동자를 해고할 자유와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줄 이익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려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결혼 못 하고 아이 못 낳습니다. 결국 인적자본, 숙련형성 다 안 되고요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노력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법제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코스트 없이 경제질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각론 정책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 업무 소관을 넘는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경제 컨트롤타워 내에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전체적인 원하청 문제 등 다 해결하는 것이 김상조 위원장님이 내각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자중하는 태도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부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복지 늘리는 정부정책 반갑습니다. 저희 국민 의당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이 공약 다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이 많이 드는데 정직해야지요. 부총리, 핀셋 증세로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핀셋 증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세계개편 하면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소득재분배 또 일부 재원 확충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핀셋 증세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 내년에 쓰임새 더 커질 텐데 내년에도 세계개편안 증세 내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쨌든 세계개편안은 법률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냅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내야 될지는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매년 내지요, 그렇지만 명목 세율 인상과 같은 커다란 정책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고소득층, 대기업 이번에 증세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더 증세할 룬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으로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 문제나……

어제도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랑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우선은 금년에……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리니까 룬이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김성식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은 일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면 내년에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도 증세 검토 추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김성식 의원**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내년에 조세개편안을 올리려면 이번에 안 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 내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 말씀은 아마도 추가 재원이 필요해서 재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증세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게 들리는데요. 현재로서 정부 입장은 이번에 세제개편안 낸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 당면 문제고요.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부총리님, 핀셋 증세의 논리로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인기를 위해 세금 문제를 한번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의미 있는 추가 세입 기반 확대 자

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여권 전체가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권 교체 녀 달 지났습니다. 운전대는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여당이 단단히 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때만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한 정당 한 정권이 과연 해결해 낼 수 있습니까?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인기 있는 정책, 인기 없는 정책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욕도 같이 먹고 꿈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생을 위한 새 정치입니다.

당리당략, 우격다짐, 국민들 힘든 삶 앞에 잠시 내려놓읍시다. 따라오라는 일방적 협치론도 거두어 주십시오. 우선 복지와 조세에 관한 여야 정당 간 정책연합부터 합시다. 협치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고 거기서 함께 내비게이션을 만들자고 촉구합니다. 성과를 모으면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연합까지 해 봅시다. 20대 국회에서 담대하게 해 봅시다. 아니면 늦습니다.

정책 발표와 설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은 공약과 달라 정성껏 다듬어 내야지 기분 내기 식으로 막 뿌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공약에 있으니 발표하고 추진하는 식이라면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고 설사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기득권층의 집요한 반발 때문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의원**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김포출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핵심협과도 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현혹되고 복지 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생각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찢려는 어리석음으로 보입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황금알을 매일 낳고 있는 거위가 분명 아닙니다. 배 찢어서 한 번에 꺼내 먹으려 들면 거위는 죽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정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가 모든 근로자들을 다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것과 또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하려는 두 가지를 아주 큰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그것이 100% 다 정규직으로 또는 어느 일정한 시점을 두고 무조건 일정 수준으로,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러면 정부가 막연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시장에 그런 사인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지요. 방향은 분명한데 다만 그 타겟이 되는 금액이 나……

○홍철호 의원 아니, 수치까지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떤 수치요?

○홍철호 의원 1만 원이다 이런 수치, 연도도 2020년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1만 원이라고 하고 2020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까 김성식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금년에 16.4%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저희가 내년 이후에 보면서 그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진지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철호 의원 좋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하는 것 해 보니까, 달려들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나오지요? 어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외환위기 이후에 생겼던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또는 어떤 유형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좋다는지 또는 비정규직으로 두더라도 안정적인 스테이터스(status)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지 또 어떤 직은 비정규직 자체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내지는 또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비정규직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지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0%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또 비정규직으로 두면서 안정적인……

○홍철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쪽에서, 교사들 쪽에서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제인가요, 아마 교육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문제로 홍 의원님이 여쭙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기왕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또 그렇지만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한번 사인이 잘못 가면, 목표가 잘못되면 여기서 그 방향대로 쏘면 목표지점 가면 아예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사인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 문제 쪽에서 사인과 관련돼서, 시장이 현혹되는 것과 관련돼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 교사 문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향은 확고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홍철호 의원 아니, 그것은 이번 정부 아니라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느냐 이런 얘가지요.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홍철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2020년에 1만 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5.2%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망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 포기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직자는 이 수치에 안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폭이 결정되는 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면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기여해야겠다고 하는 큰 방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되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도 발표했고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을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호 의원 포기가 먼저 가고 그리고 정부가 뒤에 따라가요. 늘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이러면서 구직자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예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약간의 미봉책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현장에서 접목되기 어려운, 현장 사람들은 전혀 이것 가지고 될까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이나 간접 지원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정책들, 예를

들어서 창업 또는 혁신 성장 또는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일종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홍철호 의원 벤처기업 육성이 지금 우리 정부 방향 중의 큰 방향이거든요. 내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청년벤처라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홍철호 의원 그런데 고용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기존의 기업들로부터 고용이 늘어나는 숫자보다도 아마 앞으로 창업 쪽에서 늘어나는 숫자가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창업 유형의 다양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창업이 아닌 팀 창업 또 새로운 창업이 아닌 재창업 또 청년창업 플러스 숙련창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홍철호 의원 물론 그런 구상 하셔야 돼요,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그런데 지금 있는 기업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이냐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지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겠다 그러면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어려운 얘기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존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로우면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은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번 네거티브 리스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조실과 함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 기업에 대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 중의 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철호 의원 심각한 얘기 제가 좀 해 볼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51만 7000곳인데 그중에서 이익이 전혀 안 나서 법인세를 아예 못 내는 기업이 몇 %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33%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33%. 이번에 아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홍철호 의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냐 하면, 이번에 중소기업들의 인건비가 총비용 중에서 몇 %인지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홍철호 의원** 그러면 37% 정도가 비용 중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도미노로 임금 인상이 되면 최하 10% 이상 비용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코스트푸시(cost push)에 대한 비용 증가는 있겠지만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인건비 인상 이상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사람을 더 쓰더라도 생산성으로 커버가 돼서 그것을 넘는 것이 되면 경제가 커지면서 다이내믹해지는 것이지요.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인건비 인상을 통한……

○**홍철호 의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현장과 정부 공무원들과의 엄청난 간극이네요. 봉급 올려 주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지요.

○**홍철호 의원**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아까도 전에 김성식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여러 가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는 기업들 속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갔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 분사하는 스피노프 창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철호 의원** 그러니까 좋은 회사만 다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투기식품 같은 성공한 기업만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영세 사업장, 한계기업, 지금도 어려운 아까 17만 곳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 쓰고……

○**홍철호 의원** 아니, 신경이 아니라 지금 죽어 가려고 그러는데 신경 쓰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게 늘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에

요, 제 얘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부족했던 점도 잘 알고 있고요.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쓰도록 하겠고, 저도 현장을 가 본다든지 그런 쪽도 더욱 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제가 나중에 총리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 안 가 보고 대학교 졸업 마치고 전부 다 와서 공무원 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현장을 모르면서 말이지요, 이런 정책들만 자꾸 나열식으로 말이지요, 무슨 아이디어처럼 한단 말이지요.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고요.

보세요. 인건비 올라가면 이익이 줄 것 아닙니까? 이익이 줄면 기업은 위험해져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물건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법을 어겨 가면서 봉급을 다시 덜 주거나 이것뿐이 없는데, 이걸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도 시나리오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요.

○**홍철호 의원** 아니, 맞지요. 아니, 현장은 그럴 것 아닙니까? 인건비 올려 줘서 비용이 올라갔으면 물건값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타격받는 곳은 제조업체거나 아주 스마트한 업종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철호 의원** 지금도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지으면 거기에 중국산 자재 없으면 아파트 못 짓는다는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홍철호 의원** 그런데 우리 물가를 올려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값을 올리든 벽지값을 올려요. 올리면 중국산 제품이 지금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격 차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 시나리오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생산성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인해서 내

수가 늘어나서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시나리오도 같이 저희가……

○**홍철호 의원** 단순노동이 필요한 작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데다가 이번에 뭐까지 하려 그러냐 하면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또 줄이려고 그래요.

자, 돈은 더 주라 그러고 일은 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정부는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법안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구조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후유증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모두에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과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철호 의원** 리더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보 자체가 시장과 공직사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좀 야속하시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유념해서 들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베트남으로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홍철호 의원** 베트남으로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 베트남이요? 예.

○**홍철호 의원** 그러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턴 정책은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부가 그동안 유턴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경제팀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인센티브를 줘도 시원찮은데 지금 금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

을 가지고, 경직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유턴 유도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강압적인 정책……

○**홍철호 의원** 강압이지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결정해 버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유턴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까지 사실 실적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요, 전면 재검토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종합적인 정책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한번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게요.

지금 평균임금이 2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말이지요, 한 군데 샘플을 해 봤어요. 김해시에 노동자가 1만 9000명인데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1인당 1200만 원씩 자기네 나라로 외국인들이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만 명으로 해 보니까 연간 12조 원이 유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봉급 받아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지금 인상된 대로 단순하게만 올라가도 1명당 400만 원씩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연간 4조가 늘어나요. 계산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지금 노동자를 100만으로 하셨는데 그 숫자는 너무 많은 숫자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산정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숙식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또 그 문제를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인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답습니다. ‘이제 그만 더 줘도 되는데 이렇게 고마울데가 있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은……

○**홍철호 의원**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 제도입해 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총리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통상임금에 상여금, 식대…… 지금 말씀하신 것, 숙식비 이것 통상임금에 반드시 산입되도록 정책 만들어 주시고요.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로 탄력 운용하는 것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번째 것은 저희가 지금 TF에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것도 검토를 즉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이 충분히 아시리라……

○**홍철호 의원** 국회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생까지 공무원 준비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듣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간 분야, 특히 중소기업이 그만큼 청소년 세대에겐 썩 매력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우리 교육의 탓도 있을 것이고요.

○**홍철호 의원** 호미로 막을 것 이제 가래로 막고 그것도 못 막아서 포크레인으로 막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공무원에다가 모두 올인하게 해 주는 이것은 한번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못 바꾼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깊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공무원 문호를 막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더구나 이번 공무원 증원은 아시다시피 소방, 치안, 복지 등……

○**홍철호 의원** 소방, 치안만 가지고 17만 4000명을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5년간이니까요.

○**홍철호 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무총리 이낙연** 일반행정직은 늘리지 않습니다.

○**홍철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알아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기업으로 안 가느냐 하면 대학까지 다 나와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같이 대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막장 인생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산업연수생제도 빨리 받아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100만 원만 줘도 베트남에서 5배의 봉급이에요. 주고, 100만 원 절약한 돈 갖다가 우리 청년들을 100 더 주면 300 줘요. 우리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안 받잖아요. 내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비해서 불이익받는 것이거든요. 이것 해소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자긍심 생기고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었을 때의 어떤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철호 의원** 그런데 그때는 급여가 60만 원 시절입니다. 제가 기업을 하고 있어서 잘 알아요. 지금은 200만 원이 넘어 총급여가 250만 원 시대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급여 차별을 두는 것은 국제적으로……

○**홍철호 의원** 아니요, 산업연수생만 하자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검토가 아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시간, 52시간 아까 제가 부총리하고 한 얘기 잘 들으셨을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벤처기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하고는, 양질의 일자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자리 양은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포함해

서 모든 정책들이 우물에서 솥솥 달라는 식으로 조급하게 준비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회를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27살 청년들이 50세가 되는 23년 후면 지금의 세 부담보다 개인당 7배가 되어야 된다는 국회예산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재철** 홍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예결위 간사 위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대로 놔두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혁신 성장, 공정경쟁 성장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쌍두마차가 아니라 삼두마차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처방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원님들, 단말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로 말

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투자 중점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또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혁신 성장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큰 특징은 저희가 질적·양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도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소득 주도 성장이 유난히 강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경쟁 성장, 혁신 성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성장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후덕 의원** 지난 9월 11일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만났습니다.

○**윤후덕 의원**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하고 따로 만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만나실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윤후덕 의원** IMF 총재가 '경제성장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라가르드 총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로 우리 경제의 틀을 설명했더니 공정경제 또는 공정경쟁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음악을 들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 아주 큰 공감을 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이번 방향 중에 내내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소득 주도 성장이 소수 이론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의 주장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논의되어 온 이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또 ILO에서 임금 주도 성장이라든지 또는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총수요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의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다만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절대로 저는 소수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IMF나 ILO, OECD 이러한 국제기구에서도 유사한 경제정책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주로 표현을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윤후덕 의원 부총리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최근에 1분위 소득, 최하 20%의 소득이 줄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또는 쇼킹한 통계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초과 공급에 총수요 부족한 측면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부분에 대한 소득 증대 또는 이전소득의 증대가 총수요 증대로 이어져서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한 연구에 따르면 경상이전지출 증가가 정부의 소비지출 증가보다 성장에 더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떤 주장이 맞다고 부총리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둘 중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맞는 얘기라고 동의하고요. 다만 문제는 정부가 그와 같은 복지지출을 하는 데 얼마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의 복지에 쓸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재정건전성 문제는 앞의 답에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정책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의원 내년 2018년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는 최고의 소비력을 가진 47세의 인구가 1971년생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드는 인구절벽, 소비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는 베이비부머의 2세대인 에코 세대가 70만 명 넘게 취업시장으로 나오는 그러한 인구구조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소비 위기, 청년실업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또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위기 시점에는 어떤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MF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했는데요. 우리 인구구조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큰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방점을 뒀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게끔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요. 이런 등등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들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 수준이고 또 제가 다시 정부에 오기 전에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직접 일자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수요 측면의 접근,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 나와 있겠지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개혁이라든지 또는 전직훈련이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긴 시계로 봐서 풀어야 되는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가 같이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공무원 정원이 적정하거나 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뽑겠다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현재 생활현장의 필수공무원 숫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분석에 의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우선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OECD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시다만 상당히……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고 또 이견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런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현장 공무원을 너무 안 뽑아 가지고,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 부처에서 많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테면 관세청은 한 달에 110.6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었고 해경 등 국민안전처에서는 129시간을 한 달에 초과근무를 했고 또 소방공무원은 17개 시도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무려 92시간을 초과근무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인구구조의 위기가 닥친 이 시점에서 생활현장의 필수공무원 정원을 이전 정부는 극도로 제한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합리적인 증원을 해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그런 정책을 반영했고요. 그와 같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공무원 또 법적 요건에 부족한 공무원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주로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재정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데 생활현장의 필수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나 또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7만 4000명의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추계하기로 5년 동안에 한 17조 정도, 물론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해서 연금받는 것까지 다 계산했을 적에 한 17조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고, 지금 공직 공공 부문의 인건비 규모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총지출 규모의 한 8~9%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공무원의 총인건비 수준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3%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향후 늘어난다 하더라도 9%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희는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닥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측면은 그런 것들이 공직 부문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한편 인원의 재배치라든지 공공 부문의 개혁도 동시에 병행을 할 생각입니다.

○윤후덕 의원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에서 일정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서 예결위 간사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그게 가능한 쪽의, 그런 식으로 그쪽을 좀 줄이고 신규 인원에 충원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조치를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 인건비 총액이 54.37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5.48조 원, 10.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정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서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또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정원도 감소해야겠지요. 그 시점쯤에서부터는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동 충원을 서서히 줄여 가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 갈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큰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체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맞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리고 퇴직하시는 공무원은 그래도 임금이 많은 분들이 퇴직하게 되고 새로 신

규로 취업하는 공무원이 임금이 좀 낮지요. 그로 인한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원은 극히 줄이고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을 늘려 가는 식의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 것들을 함께 설명하고 제시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또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또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공 부문, 현장 또 법정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공무원을 늘렸을 적에 우리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또 절대량 또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도 같이 봐 주셔야지 공공 부문 인력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SOC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SOC 투자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SOC가 지금 약 4조 400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SOC가 줄어들면 성장 동력 내지는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하시는데 과연, 그리고 복지 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어떤 것에 대한 투자가, 물론 제대로 됐을 경우의 얘기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을 높일 수 있냐는 측면에서 다시 봐야 될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 줄어드는 것에 따른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된 이후에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또는 SOC 공기업의 선투자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지역별로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편성돼서 과다하게 이월되고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SOC 예산에서. 상당히 큰 규모예요. 이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소하실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 기억이 맞다면 금년에 SOC에서 사용이 안 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요. 그것은 팩트니까요. 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 SOC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재정 당국은 여러 가지 재정준칙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십시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후덕 의원 호남 홀대 SOC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남 홀대 예산 편성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특정 지역을 고려해서 홀대를 하거나 우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윤후덕 의원 전혀 그렇지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윤후덕 의원 호남 지역의 SOC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지역의 상징적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154억밖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판단 또는 그에 따른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난해 8월부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거의 2조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수년 내에 규모가 큰 사업이 이루어져서 호남의 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간 점검에서 나온 표입니다. 여기에서 직선으로 있는 선은 2006년도에 세워진 노선이고 기

재부 안이 있고 지금 국토부와 전남도의 안이 있습니다.

장관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이 노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호남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으로 그리고 국가경제가 재정적 여건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재검토는 언제 보고가 됩니까, 완료되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거의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결론이 나서 기본계획비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이번 예산국회에서 결정된 노선에 예산을 더 증액해도 장관께서 동의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회에 와서 동의하는 권한은 기재부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국토부는 물론 동의합니다.

○윤후덕 의원 기재부장관님이 계시네요. 동의하실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데 정작 지역 홀대 예산은 사실은 경기도 북부 지역 그리고 또 강원도, 인천의 접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간신히 금년에 5억 원의 조사 예산을 확보한 동서평화고속화도로입니다. 이게 B/C가 0.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북부 지역 국회의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의원 이것 제대로 챙겨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금 예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변경이, 거의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타 산정 방식이 좀 바뀌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사업들도 상당 부분 할 수 있도록 바뀔 것으로 봅니다.

○윤후덕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지난달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는 벌써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는 한탄과 우려뿐입니다.

역대 사상 균형·탕평·통합 인사라던 문재인 정부는 이미 내로남불, 보은·코드 인사로 망사를 넘어 참사 수준입니다. 외교안보는 먹통에 철학도 전략도 부재한 정부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완전한 봄바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포퓰리즘 정책들만 쏟아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제로화, 이른바 J노믹스라고 불리는 소득 주도성장은 말만 거창할 뿐 제대로 된 재원대책이나 재정계획이 전무합니다.

세금폭탄, 복지 시한폭탄이 돼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치와 소통은 사라지고 일방적 독주만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지역 방문해 주겠다는 약속 지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균형법 제92조의6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뭐지요?

○**이장우 의원**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장우 의원** ‘대한민국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견해로는 그런 건……

○**이장우 의원**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장우 의원** 반대하시지요?

동성애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총리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동성혼 합법화는 시기상조고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장우 의원**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동성혼 합법화는 현 시점에서 반대합니다.

○**이장우 의원** 그러면 낙태 처벌·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현행법을 바꾸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장우 의원** 그러면 옛날 하나회처럼 법원 내에 사조직을 운영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사조직입니까?

○**이장우 의원** 어떤 경우든, 법원 내에 특정 연구단체를 빙자한 사조직을 운영한다면……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지금같이 말씀드린 부분들의 의견이, 찬성한 의견이 많은 분을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사조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실체를 알기 전에……

○**이장우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동성애 문제나 아까 했던 낙태 허용 문제 이런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이낙연** 개인적 의견하고 공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취하는 의견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어쨌든 총리님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장우 의원** 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 좀……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아쉬움만 있습니까, 개선해야 됩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개선을 이미 대통령도 지시를 하셨지요.

○**이장우 의원** 공직 배제 5대 원칙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무너뜨려야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미 여야 간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요.

○**이장우 의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것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을 겁니다.

○**이장우 의원**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이지 합의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보완을 하기로 했으니깐요,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의……

○**이장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니깐 지금 철회한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의 사정을 감안한 현명한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행정수도 세종시 완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행정부의 많은 기관들이 세종시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헌법문제라 그러면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국회하고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좋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법률사항일 겁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총리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총리님 오늘 말하지 않으시는 말씀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말씀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과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맞지 않을 수

도 있겠다 이 정도는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 규모가 3분의 1, 전체 예산에서 넘어서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장우 의원**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재정계획의 중점투자 부분을 좀 전환하는 측면에서 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바람직하게 짜려고 애를 썼고요. 또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같이 균형 잡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장우 의원** 복지예산이 향후 5년간 9.8% 증가하면 2021년도에 188조 돌파하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장우 의원**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현재 OECD 수준에 비해서 저희가 반 이하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까지 가서 복지 수준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을 취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여당 대표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부총리께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도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길래 제가 그 얘기가 나온 취지나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여러 가지 고려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과열지구 위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은 전국적인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측면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그런 문제는 재정 당국에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이장우 의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실무적으로 청와대하고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늘 상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장우 의원** 청와대 의견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청와대 의견

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장우 의원** 청와대 의견을 여기서 말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청와대도 입장이, 제가 청와대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의원님 질의에 제가 성실히 답변 올린다면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우 의원** 당정이 엇박자 내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꼭 당과 정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안이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이 정부 성공의 공동책임은 여당과 정부가 함께 지는 겁니다. 당정이 서로 이것을 긴밀하게 상의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상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장우 의원**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디하고, 당하고요?

○**이장우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실무적으로 죽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직접은요? 정책위의장하고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보유세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래서 엉터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뒷받침하려면 여당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여당하고 상의를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이런 문제에……

○**이장우 의원** 그래서 이 정부가 독주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당하고라도 상의해야지, 야당하고는 못 하더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쨌든 이 세

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당하고 비교적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장우 의원**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잘……

○**이장우 의원** 여당하고도 소통 안 되는 정부가 어떻게 야당하고 협치하고 소통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당과 소통 안 한다는 말씀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이장우 의원** 먼저 부총리가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2차관 시절, 국무조정실장 시절에 ‘재원 마련 없는 공약은 허구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비슷한 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비슷하게 안 하고 직접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하여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우 의원**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했으면 했다고 하는 것이지 비슷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요, 워딩까지 정확한지 제가 그것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 말씀이지 그 취지 말씀은……

○**이장우 의원** 본인이 한 말도 몰라요? 재정건전성 강조하며 하신 말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재정건전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본인이 한 말도 기억 못 하는 분이 무슨 부총리를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단어까지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2012년 7월에 무상보육 비판하면서 ‘재벌가 자식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 주는 것은 복지 과잉이며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지금도 생각이 똑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대책이 없는 복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최근에 예산안 내면서

했던 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내년도 예산 또 우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178조에 대한 재원 대책은 충분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정권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다른 얘기 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공직자입니다. 소신을 지켜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소신을 흐트러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장우 의원** 2013년 6월 달에 박원순 시장하고 그 문제 가지고 설전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보육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장우 의원** 부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장우 의원** 했으면 했지 '했던 것 같습니다'는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주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장우 의원** 저는 대한민국을 망친 것도 관료 집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떻게 생각 하시는 것은 의원님 자유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장우 의원** 부총리처럼 소신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이 정부에 있으면 결국 이 정부가 실패 하게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무능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이장우 의원** 부총리께서는 바른 소리 하고 바른 충언 하고 소신 있게 부총리 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복지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국민은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정부도 그다음 정부도,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복지를 어떻게 늘려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복지를 쓴다면 그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을 올릴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복지도 경제력에 맞게 또 미래 세대의 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 지출을 늘렸습시다마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균형 잡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우 의원** 내년도 예산 SOC 23% 줄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20% 조금 넘게 줄였습니다.

○**이장우 의원** 가장 큰 타격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지역 경제와 지역 고용 쪽을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업체하고 지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 대책은 됩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SOC 예산의 효율성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줄어든 SOC 예산의 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한 3조 가까이 되고요. 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0%까지 정부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장우 의원** 부총리님, 통계로 얘기하는 것과 현장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리께서 현장에 오시라고 한 것도 그 뜻입니다. 현장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통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현장을 가더라도 일단 정책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과 SOC 공기업들의 선투자를 통해서 만약에 지역 경제와 고용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가 보완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건설투자 10% 줄이면 일자리 27만 개 날아가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건 서비스도 마찬가지지요.

○**이장우 의원** 마찬가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서비스는 오히려 더합니다.

○**이장우 의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OC 공기업의 선투자와……

○**이장우 의원** 그러니까 책상머리의 그거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목소리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지역에 가서 한번 들어 보실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양호한 상태입니까, 위험한 상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이장우 의원** 양호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장우 의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다 합쳐서 2015년도에 1003조 정도 됐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장우 의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과 군인연금 총당 부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손실 규모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래서 지금 숨겨져 있는 국가부채가 있다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숨겨져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장우 의원** 지금 정부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왜 그걸 파악을……

○**이장우 의원** 왜 통계를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장우 의원** 왜 통계를 안 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통계를 가지고 있지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숨겨진 부채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장우 의원** 그래도 경제부총리가 그 정도는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정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장우 의원** 국가채무 기준을 협의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해서, 군인연금 총당부채까지 다 포함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IMF 같은 그런 사태가 안 온다고 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지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부채의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방까지 포함하느냐, 총당까지 포함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OECD나 IMF에서 갖고 있는 국제 통계에 의한 국가부채를 우리 GDP를 봤을 적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건전한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도 그것이 오히려 악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장우 의원** 나중에 부채 문제로 나라가 휘청거리면 책임질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약속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이번 예산편성할 때 청와대하고 상의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당연히 보고를 드리지요.

○**이장우 의원** 대통령 핵심 지시사항이 뭐였습

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지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산의 전반적인 방향과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러면 예산 지침사항을 저한테 자료로라도 보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저희 편성지침은 드릴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구두로 된 것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장우 의원** 이번 예산안에서 김동연 패싱을 넘어서 배싱(bashing), 김동연 때리기 산물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썄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장우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업무 성격상 정규직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본적으로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그런 직군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거의 다 하고 싶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뜻이라면 정책의 목표로서는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정치적인 선언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비정규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죄다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장우 의원** 저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1일 날 교육부 발표에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현실도 있지만 현행 법률상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정책목표지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장우 의원**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때문에 지금 학교 선생님들 간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장우 의원** 특히 이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이 성명서도 내고 지금 굉장히 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장우 의원** 희망만 준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기대를 가지셨을 텐데 기대를 이루지 못한 분들의 마음 아픔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정말 희망만 주고 좌절시키면 아주 더 어려움이 있고……

○**국무총리 이낙연** 그 대신에 처우 개선 등으로 그분들의 기대를 반이라도 부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저는 총리님께서라도 비정규직 제로화는 불가능하다, 현실에 맞게 재정에 맞게 다시 수정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조건하에서 목표를 가지고 착실히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대통령께서,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까지 차단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장우 의원** 처음에 가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장우 의원** 60개 외주업체 정규직 전환을 놓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노사 그리고 전문가들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장우 의원**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장우 의원** 지금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 노동자와 사용자, 지도

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종의 중재안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정말로 희망을 가졌던 비정규직 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리고 때로는 현실에 부딪히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잘못되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장우 의원** 저는 그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장우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최저임금 우려를 많이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장우 의원**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늘렸을 때 제일 어려움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아닐까요? 내가 편의점을 하는데 직원 한 명 아르바이트생 두는데 내가 버는 돈보다 아르바이트생을 더 줘야 되는 상황, 그러면 결국 부총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이장우 의원** 어려움이 아니고 부총리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사업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요. 채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이장우 의원** 편의점 하는데 돈을 벌고 싶어도 손님이 있어야 돈을 더 벌지요. 그러면 직원을 결국 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장우 의원**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식당도 마찬가지지요, 커피숍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채용을 안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래서 의원

님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또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실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저는 부총리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 정부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최저임금 1만 원 상승할 때 향후 3년간 한 140조 가까이 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숫자……

○**이장우 의원**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게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기는 할 겁니다마는 의원님 근거 있는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이장우 의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하면 거의 한 20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 바로 따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IMF 총재의 충고를 되새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빠르게 최저임금 올리면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낙오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IMF 총재는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 끊어서 말씀하시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또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없는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남유럽국가에서 실패한 경제실험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보편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와 무분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흥청대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문지마 복지의 종말은 경제적 재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국민의당 이연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연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합니다.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을 사면서 불안하고 경제 파탄의 격정에 불안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IMF 이후 재벌 중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도 정치권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한 채 임시적 진통제만 주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연명시켜 왔습니다.

가계부채는 1400조 원을 넘었고 공공 부채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미 쇠락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기는커녕 ‘국가가 다 하겠다’,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젖어서 혈세를 불공평하게 배분하고 오히려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벌려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5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듯 장밋빛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이연주 의원** 기대가 컸는데 좀 더 활약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연주 의원** 사진을 잠깐만 보시면요. 사진 보여 주세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와대 호프미팅, 7월 말에 재벌들과의 호프미팅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이연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기업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업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새 정부의 기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런 기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주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 역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부터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벌 총수 처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열심히 하실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또 혼을 내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의원** 백날 총수를 처벌하고 해도 시스템이 개혁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근시안적인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기관이 되게 불공정한 행태를 많이 일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렇습니다.

○**이연주 의원** 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 단가를. 그래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벌어지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이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니라 하청 업체하고 협력 업체하고의 단가에 대한 불공정성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공부문이 노사 관계

에서 또는 노동시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공공부문이 협력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모범적인 원사업자로서 공정한 거래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언주 의원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께서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하니깐 갑자기 1만명을 다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역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제 정책의 조율을 위해서 경제부처 전체가 잘 숙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예를 들어서 보안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계약에 용역 하는 파견된 직원들이 비정규직, 용역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규직화해야 되니까 다 몰수할 건가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 파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쟁송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런 몰지각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다 정규직화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챙기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력업체에 제대로 서비스 단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그래서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지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래서 영구직,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성격상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 소견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파견업체로부터 나와 있던 분들의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인력을 부당 스카우트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했고요. 공공부문이 특히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때 기존의 노동관계법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소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도 좋고 그렇게만 되면 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국가권력을 막무가내로 전횡해서 법을 위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새 정부에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방금 한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가, 용역계약인 경우예요.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급진적으로 계약을 마구잡이로 파기하고, 인천공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인천공항은요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독점체제를 유지해서 지방공항을 억압시키고 거기에 국제노선을 개설을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독점의 이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개선해야 될 텐데 그 이익을 더 같이 나누고 좀 더 편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용역계약인데 그러면 멀쩡하게 계약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인수를 합니까? 이것 어떻게 뭐 국영화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유형의, 인천공항 비정규직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요.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룹도 있을 거고 또 남아 있으면서 처우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끝까지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하고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전체 비

정규직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세를 투입해서 공공부문만 정규직화를 억지로 했을 때 그게 마중물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간까지 확산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을,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마는 전부 다 한꺼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민간부문의 경우는 정부가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주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한목에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 의원 간과해서 안 될 것이요, 우리가 어차피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혈세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막 해서 정규직화를 했다 한들 민간이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민간의 활력만 없어지고 민간에 부가 집중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경제가 더 죽게 되고 그렇게 돼서 민간의 비정규직은 더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민간의 정말로 어려운 비정규직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지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언주 의원 아니, 저는 이렇게 계속 가면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격차 해소가 아니라 격차 심화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민간과 공공의 격차 문제는 이 문제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고요……

○이언주 의원 그런데 더 심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5%를 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부문에……

○이언주 의원 공평하게 배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민간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우리 경제 구조를 끌고 가는데 그렇게 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그런 데 참여하면서 좋은 구도를 만들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런데 한정된 재원이니까요, 공무원 증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재원입니다.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뭐가 가장 시급한가, 이 문제인데, 5년 끝나고 나면 공무원 더 이상 안 뽑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공무원은 어차피 중장기 공무원 수급계획에 따라서 일정 부문 더 뽑는 부문도 있고 또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숫자도 만만치 않고 그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17만 명 채용했을 때 30년 뒤에는 총 350조 늘어난다—국회 예산정책처 통계인데—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들, 그분들은 그때 되면 이제 공무원 뽑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뽑았기 때문에, 5년 동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의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언주 의원 당겨쓰는 것도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수급을 보면 뽑는 인원도 있고 또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 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정 요건이 부족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일정 부분 보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

○이언주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냥 필요한 수급에

따라서 뽑는 거지요. 그것을 왜 일자리 창출이라고 내세웁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일자리로 투입할 재원이 있으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조선, 해운 이런 데 실직된 사람들한테 써야 됩니다. 그분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요. 어째서 멸절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더 시급합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조금 디멘션(dimension)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 가지고 어떻게 그 설명을 잘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이라든지 또 해운이라든지……

○이언주 의원 아니, 그것도 돈이 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언주 의원 실직 대책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먼저 써야 된다, 멸절된 일자리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을 쓰는 의사결정은 결국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우선순위 높은 부분에 쓰는 측면의 의사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제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구조 자체가 일단 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증가되고 그 총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되니까 내수가 증가해서 성장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제가 현재 우리나라하고 안 맞아요.

첫 번째, 임금 인상이 제대로 됩니까? 한계기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동화되면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제대로 안 돼요. 총소득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총소득도 반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소득이, 실제로 임금이 형식적으로 늘어나도 사람들이 부채이자 갚는 데 바빠서 소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내수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좋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다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 한 축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진작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가처분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활비 경감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료비·교육비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사람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그것으로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혁신 성장 쪽입니다. 우리 경제의 과일을 키우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을 같이 종합적인 그림으로 봐 주시고,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언주 의원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서 성장까지는 잘 연결 안 되겠지만 효과는 약간은 있겠다,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 주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글썽요, 일부 동의하고 또 조금 다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소득 주도지만 그 안에 실질소득을 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을 하게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소득을 더 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가처분소득을 같이 올려 주는 측면이지요. 이것은 다분히 수요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컨트리뷰션(contribution)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 성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활동을 하게 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창업과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의 불륨 자체를 키우는 것

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전체 그림을 봐 주시고, 그중의 한 파트가 소득 주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섞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소득 주도 성장 문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은 일용 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비·교육비. 그렇지만 지금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가 아까 전제를 다 짚어 드렸잖아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는데도 억지로 막강요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의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좋은 분석에 감사하고요.

다시 두 가지를 제가 답변드린다면, 첫 번째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이언주 의원 작동을 안 한다고. 그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로는 소득분위 1분위인 최하위 20%가 지금 6분기 연속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다 임금 소득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통계인데 이 정도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은 작동이 좀 될 텐데 임금을 인상해서 하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 성격의 생활비를 줄이는 것과……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작동이 잘 안 된다고요. 지금 한계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가계부채도 말씀을 드렸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어쨌든 또 나중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탄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합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급진적인 시도를 멈추고 천천히 하나씩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정을 우리 처지에 맞게 지출효과를 보면서 공평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계층부터 복지와 사회안전망, 아이들 교육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가장 생산적인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동력이 꺼진 나라가 아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 빚더미 없는 제대로 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주선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네요.

다음은 부산 부산진구를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를 출신 이현승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인사배제 5대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낙하산식 보은인사, 코드인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해 놓고도 정작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SOC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상에 천국을 건설 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는 한 철학자의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장님,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스티브잡스를 비교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한 적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런 적 있습니다.

○李憲昇 의원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이미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憲昇 의원 위원장의 부적절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만하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정말 공정거래위의 위상도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소송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기업은 정부의 머슴이나 청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될 경제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점을 잘 명심하시고 공직에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李憲昇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낙하산 인사의 일반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李憲昇 의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한 번 신세를 지게 된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결국 낙하산 인사는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될 공산이 큼니다.

총리, 지난번 예결위 결산회의에서 부산·경남 은행지주 회장 선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그 진상을 알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 하셨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李憲昇 의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문제는 ‘누구를 아는 사람이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의원 결국 지역사회가 우려하던 대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달에 ‘BNK 순혈주의 문제점과 향후 지배구조 방향’이라는 문건이 공개된 바 있는데 그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협력이 잘 되어야 한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을 회장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문건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모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지만 지역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초 8월 17일 날 선임하기로 했다가 21일로 미루고 또다시 9월 8일로 미뤘지만 결국에는 지역사회와 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내정자를 낙점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제고문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상고 동문으로 알려진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내정자는 부산·경남 은행 금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만 72세의 고령으로서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에서는 신임 회장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7월 24일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현 집권 여당의,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점됐으니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BNK는 사고를 치지 않았느냐’, ‘지주회사 회장은 외부에서 하고 은행장은 내부에서 하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총리, 이처럼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호언장담한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순수 민간 금융그룹인 BNK 낙하산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새로운 관치금융의 시작이며, 내정자 스스로 주총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요 보직에, 특히 민간 금융 부문에까지 보은인사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적폐청산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원칙적으로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현실

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의 금융 관행하고는 다 위반되는 그런 일이고요. 만약에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청산을 해야 되지만 문제인 정권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적폐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지역사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번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의혹을 살살이 조사해서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李憲昇 의원** 만약 미흡할 경우에 국회 차원에서 BNK 관련 청문회와 민간그룹 내 인사 개입 및 업무방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추가 배치된 사드 4기에 대해서 ‘임시배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李憲昇 의원** 저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해도 되고 철수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내법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李憲昇 의원** 그러면 한 번 배치되면 영구 배치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항구 배치로 가는 것입니다.

○**李憲昇 의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영구 배치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李憲昇 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드 배치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인지 또는 우회적인 것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피해의 접수라든

가 또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의원**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를 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 할 때 그것을 도와 드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경제부처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李憲昇 의원** 총리,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중 FTA 협정문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李憲昇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가 이미 6개월 전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를 끝내 놓고도 아직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경우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판단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의원** 그 판단은 이미 6개월 전에 내부 검토를 끝내 놓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중 FTA 협정문 위반에 대한 제소 여부 및 후속협상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의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지요? 내년도 예산안 큰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합니다.

○**李憲昇 의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SOC 예산을 무려 20%나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이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 SOC 예산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연구를 보면 SOC 예산이 이른바 지출승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점 낮아진다, 또는 일자리 창출에 그다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SOC 분야가 상당한 정도까지 확충되고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SOC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국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李憲昇 의원**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SOC 투자는 정부 지출 분야 등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클 뿐만 아니고 실업률 인하효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SOC 투자 1조 원이 줄어들 경우엔 일자리 1만 4000개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도 0.06%p가 하락한다는 분석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SOC 투자를 통해서 서민층이 소득을 늘려서 전체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원전건설계획 완전 백지화를 선언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거 때부터의 공약입니다.

○**李憲昇 의원** 신규 건설뿐만이 아니고 이미 1조 5000억이 투입된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李憲昇 의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정책 집행의 책임을 민간을 포함한 공론화위원회에 미루겠다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李憲昇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李憲昇 의원** 그렇다면 지난 수년간 이미 원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아십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배정받은 자율유치가산금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자율유치가산금의 조속한 집행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론화 결과가 나오고 또 그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피해 지원의 문제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의원**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정권은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와 순수 민간 금융그룹인 BNK 회장 인사마저 공개된 문건에 나온 각본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정권을 창출하는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향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진정한 경제정책이 절실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인 슈뢰더 전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의 개혁정책을 통해서 재집권에는 실패를 했지만 독일 경제를 되살려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리더라면 정권을 잃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을 명심하시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인사와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주선** 이현승 의원님, 반응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재벌총수 전횡 방지와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재벌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전과 다른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경제민주화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그리고 경제민주화 의지, 확고한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재벌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교수님 출신이시니까, 혹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계획표 이런 것들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지금은 제가 교수였다는 사실을 빨리 잊어버려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점수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의지에는 A+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 대한, 이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역시 점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매우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약들은 상당 부분 이행이 됐지만 그 이외에 상법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공약의 이행은 일정 정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 과거 정부에서 놓쳤던 부분까지 다 합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재벌 총수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그 의결권이 다시 부활하면서 그것

을 주식 교환을 통해서 지주회사에 모음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금의 새로운 투입 없이 강화되는 그런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인적분할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요, 정몽준 회장의 10.15%밖에 안 됐던 지분율이 25%대로 경총 뛰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벌 총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고 판타스틱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꿈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 2015년에 1건에 불과했던 인적분할 공시가 2016년에는 6건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게 2017년에 가니까 6개월 만에 7건이 돼서 2016년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2건의 3.5배. 왜 이렇게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최근에 한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거나 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아마 상당수 그룹들이 일정을 앞당겨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인적분할 공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나 하면 물적분할도 아니고 인적분할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그 회사들 중의 대부분이 자사주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꿈수를 노리고 하는 것이라면 위원장님이 속도를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고, 또 하나 이런 법제도의 개선에 못지않게 결국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같은 그런 시장의 견제·감시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꿈수를 통한 지배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용진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들의 편법 지배력 강화, 또 편법 승계 문제 관련해서요 재벌닷컴에 따르면 20대 재벌그룹 40개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 상장사 주식 규모가 총 6조 7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로 지배력은 강화하고 또 세금 회피로 재벌 공익법인을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저는 공익법인이 아니라 사익법인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장려하는 그런 통로로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공익적인 목적과는 배치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배력 강화 등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최근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게 될 텐데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히 취지와 맞지 않는 악용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저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재산으로 계열사 주식 매입하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야당들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님이 속도 좀 내 주시고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 드리려고 하는 복지 혜택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껴 쓰겠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증세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공론이 모아진다면 추가적인 증세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께서도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만 준비가 안 돼 계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건 아니구요, 의원님. 그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178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178조의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인 측면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비교적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의 증세 문제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증세 문제를 함부로 또는 최종 결정되기 전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세 특위가 하반기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세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또 의회와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 한편으로는 부총리께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

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 전부 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야당이 증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니요. 이것 복 받은 정권이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부터 협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논의를 이끌어 주는 프로세스를 잘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득세·법인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 당국에서 실무적으로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2000억 이상 되는 과세 기준의 기업이 냈습니다만 500억, 2000억, 3000억 이상, 또 5000억 이상, 전부 하듯이 모든 시나리오대로의 실무적인 검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의 수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주 탄탄하게 모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국회에서도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 국토교통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세월호 사건이나 가슴기살균제 같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기업들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결합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책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무유기 혹은 무책임한 태도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죄송한 말씀입니

다만 제가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자동차정책과는 현대차 출장소다, 항공정책과는 대한항공 출장소다’라고 하는 비아냥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도 우리 정부의 신뢰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관련해서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리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현재 42.2% 정도의 시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수치상은 그런데요 국토부가 자발적 리콜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범위와 대상, 또 진행 방법과 결함 기준이 현대차 마음대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직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드리고는 있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이 모호한 리콜 기준 때문에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이 나간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현대기아차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을 받은 뒤에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를 당해 가지고 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황급히 엔진을 교체해 줍니다. 우리 의원실에는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조사의 자발적 점검을 받고도 그 직후에 결함이 발생하는 현상,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하고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리콜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부가 마음을 다잡고 소비자의 편에 서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더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는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이

전 장관 국토부랑 전혀 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런데 현대차의 결함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겠는데요. 결함을 고쳐 주겠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리콜했다고 광은 내지만 엔진 소음, 청정도가 얼마나 나빠야 결함인지 수치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기준도 없고요. 엔진 교환도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마나 한 리콜이고 부실 리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매뉴얼 문제인데요 우리 국토부가 현대차로부터 받은 리콜 관련 서류는 딱 한 장입니다, 매뉴얼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세타2 엔진에 관련된 리콜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2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보면 미국에서는 무려 10장이나 되는 꼼꼼한 리콜에 대한 매뉴얼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소비자들은 그저 그냥 하등 국민의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국토부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이 내수시장 점유율 70%까지 지켜가면서 키워 왔던 우리 기업인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에게는 잘해 주고요 우리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고객님이고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호갱님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째깍이 리콜을 하는데, 미국은 꼼꼼한 리콜을 하고 우리는 째깍한 리콜을 하는데 거기에 국토부가 승인을 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고요. 지난 7월 달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리콜을 할 때 리콜 매뉴얼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콜할 때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부산 싼타페 참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번에 의원님이 대통령질문에 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박용진 의원** 17년 동안이나 운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손수 운전을 하다가 아내와 딸 그리고 손자 두 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망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 싼타페 참사의 원인으로 싼타페 차량의 고압펌프 엔진오일의 누유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누유현상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계적 결함이 의심되고 이 사고 차량이 바로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2008년하고 17년에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지난주에도 실험을 한 번 다시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랬는데 아직 충분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해서요 필요하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하마터면 가장 큰 피해자인 차량 운전자와 과실치사로 구속될 뻔 했던 일입니다. 다행히 무혐의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특별 재조사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용진 의원** 5월 12일 날 국토부가 검찰에 현대차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요 수사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박용진 의원** 그런데 이때 세타2엔진 결함은 폐했다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안 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 수사 의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YMCA에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YMCA가 고발한 사건이니만큼, 저희들이 누가 고발을 했는지 간에 고발된 사건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2015년에, 이미 2년 전에 미국에서는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이 진행됐는데 2년 동안 우리 국내에서는 숨기고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작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방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수사의뢰를 받아 놓고 5개월 동안 속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수사 의뢰하는 것 책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달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잘못된 환헤지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께서서는 혹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키코 사건이지요.

○**박용진 의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는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검찰이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말아서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키코 사태야말로 대표적인 금융권의 적폐 사례로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계셨으면 법무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리에 안 계시니까 법무부를 통할하시는 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문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났던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결에는 이른바 은행 측의 안내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라면 법리 적용을 잘했느냐의 문제만 남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검찰의 무혐의가 어떤 문제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지 그런 상황이라면 재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총리님, 대법원 판결은 민사재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기와 관련된 행위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형사재판 사안이라서요 저는 재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금리 0.2%가 바로 수수료였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당국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박용진 의원** 그 검토를 지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주선**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그렇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신라 경덕왕 때 백성을 편안히 해 줄 노래를 지어 달라는 왕의 청을 받고 충담 스님이 지으신 안민가에 보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면 나라가 태평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답게 살아야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보니 국회가 국회답지 못해 국민들께 부끄럽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 이 정부가 과연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될 첫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는 바로 ‘과행’이었습니다.

과행의 이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언론 농단, 언론 탄압에 앞장서 왔던 자유한국당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발부된 MBC 사장 영장 문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며 보이콧 했습니다.

언론사 사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무슨 성역이라도 됩니까? 이게 국회 과행의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언론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공영방송 MBC 문제는 상식을 가진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언론의 문제이자 노동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소통행보 많이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막걸리 소비량은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혜선 의원 파업에 대한 보복이나 노조활동 방해 또 부당한 해고·징계 인사나 인사 발령을 남발했다면 MBC 사장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 설득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감사합니다.

○추혜선 의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후퇴했다는 비판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지금 정부가 입법예고한 보편요금제, 지난 대선 때 정의당의 핵심적인 통신비 공약이었고 제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알고 있

습니다.

○추혜선 의원 보편요금제라는 것은 일부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또 다른 요금제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안을 살펴보니 보편요금제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시된 보편요금제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보편요금제의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이용자의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것을 대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요금에 문자는 무제한이고요. 200분 통화를 쓸 수 있고 1GB 정도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민사회단체와 업체 또 정부와 같이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또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 좀 희망적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이용자 중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평균 데이터 사용량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대개 한 1.8 내지 2GB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보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민망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우선 아직 사회적 논의 기구가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많은 변수를 가지고 갈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혜선 의원 보편요금제의 저작권자가 누구라고 알고 계시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아마 저작권자라는 것보다도 존경하는 추혜선 의원님께서 그

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제가 시민단체 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름을 갖다 쓰면서 내용을 갖다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이렇게 부족한데 서비스 제공량을 확대해서 수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된 게 기초연금수급자 65세 1만 1000원 더 경감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5% 더 올려서 하는데 그 부분이 통신사의 매출에서 차지되는 부분이 한 1조 5000 정도 됩니다. 또 그게 취약계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 부분까지 지금 1단계가 끝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까는 다행히 기업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흘러갈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또 그 과정에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 적용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900만 명에게 총 1조 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애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된 것은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급을 해 달라는 건데, 한 1400만 명 정도가 당장 혜택을 못 봅니다.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소급은 기업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어저께 통신 3사에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 소급을 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졌고요, 나머지 분들은 매월 아마 한 육칠십만 명 정도가 넘어오게 되면 내년 해 가기 전에 전원 다 여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지금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러면 이것을 단계별 혜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처음에는 신규 가입자만 됐다가 6개월 남아 있는 사람에게 다행히 합의가 되어졌고요, 그 나머지 사람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러면 통신사업자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장관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나름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추혜선 의원 저는 이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민생의 문제로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렸던 것이 가계통신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본료 폐지 공약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대안마저 사실상 축소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국민께 사과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기회를 드릴 테니 이 자리에서 좀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사과보다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의 ‘기본료 폐지’라는 의미가 가계 생계비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시켜 주자는 취지의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 기본료 폐지입니다.

이런데면 기본료 폐지를 했을 때 6100만 명 가입자가 한 9조 정도 됩니다, 통신사 부담이.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미 해명을 했고요. 그 취지에 맞춰서 1단계 기업하고 협의한 것을 지금 내놨고, 보편요금제와 그다음에 분리공시제 또 단말기자급제 같은 것은 이제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저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할 사안이 아니고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좀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이를 위한 책무도 물론 부과되어야 되지만 정부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편요금제 지금 내놨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신원가도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통신원가에

포함된 주파수 경매 대가, 정부가 이렇게 포기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돌려주는 통신 서비스 필요할 때다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원가 공개는 지금 대부분이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공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는 5G로 넘어갔을 때 통신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에 통신비용을 경감해 주면서 5G 투자 여력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현재의 주파수 경매 체계로 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경감해 준다는 것보다도 주파수 경매 대가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장관님, 아시지요? 모든 영역의 물건을 사고팔 때는 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신원가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통신원가를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지요. 저는 부처에서 사업자들의 입장을 계속 수용했던 것이 그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짚어 주시고 규제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 당시 미래부였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죽음의 부처로 불리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 시급하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9월 5일 발견이 되신 분인데 서광주우체국 고 이길연 집배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우편물 배송을 하다가 마주하는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해 차가 충돌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그러면 이것이 공무상 재해입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먼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슬프기도 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고 이길연 집배

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공무상 재해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아시는 대로 요양 신청 후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이분의 사망 과정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 무사고 1000일 달성을 위해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하지 말고 병가를 쓰라고 그런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확인은 안 됐지만 듣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출근을 재촉한 문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봤는데요.

(유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이길연 집배원의 유서입니다.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제가 유서까지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추혜선 의원 다른 곳도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열다섯 분, 2017년에 열다섯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과로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런데 주로 업무의 사고가 많습니다, 배달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비율이 18%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공무상 재해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의원님, 그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정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여기 자료를 보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가 96%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신청할 수 없는 어떤 희유나 상황이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경영평가에 지장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경영평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압력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제 광주 가서 제가 유가족과 동료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유가족들 “사과라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문제는 지방우정청 직원들이 빈소에 찾아와서 공무상 재해 신청 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다, 거기서 사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것을 사인해야 될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관 뚜껑을 열고 사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본부의 문제입니다, 우정본부. 우정본부의 고질적인 갑질, 일하는 사람들 마음껏 하대하고, 이 죽음의 행렬이 반복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보거나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왜 괴롭히느냐? 우리 집배원들이 2만 명이 넘고 엄청나게 많은데 당연히 사고사도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또 이게 언론에 문제가 되거나 하면 사건을 축소해서 만천하에 보도자료 뿌립니다. 거의 고인을 욕되게 하는 보도자료 뿌리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장관, 우정사업본부만 제대로 잡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 내놓으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체로 과로사나 등등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연말까지 282명 정도를 충원을 합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3600명은 조금 검증을 해 봐야 되지만 우선 282

명과 그다음에 52시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다른 부분과 함께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감사합니다.

○추혜선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를 출신 홍의락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팬찮습니다.

○홍의락 의원 올해가 2017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올해가 1997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홍의락 의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는 기업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많은 영업이익을 내도 그에 상응한 고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은 고용에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도 나서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공공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 민간일자리 늘리기가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22조 2000억을 쏟아부으면서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1만 개 일자리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일자리 예산으로 52조 가까이 투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악조

건 속에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자리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꼭 나쁜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재정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겠느냐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의 충정에서 나오는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홍의락 의원** 그것이 충정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하고 성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80억을 삭감한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산에서도 많은 공공자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켜 내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은 아까 야당과 우리 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이 19조쯤 됩니다만 그중에 83%가 민간으로 가는 돈입니다.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것은 16.6%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두 공공부문에만 쓰고 공무원 증원하는 데만 쓸 것이라는 것은 다소 과장된 관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의락 의원** 예, 총리님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잠깐 나오시지요.

부총리님, 수고 많으신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홍의락 의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보겠습니다.

2012년을 비롯해서 3년간, 2014년에는 무려 10조 이상, 10조 9000억 정도 사상 최대의 결손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세수초과가 나타났고 올해도 세수초과가 20조가

량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20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의원** 그러면 이 세수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세수를 추계하는 재정 당국의 추계도 저희가 다소 좀 미흡한 점은 있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세수는 경기변동이라든지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16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5조 정도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에 따라서 법인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또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정부의 비과세·감면 노력도 계속됐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와 같은 세수초과가 났는데요. 조금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5년 또는 10년 동안에 저희 세수오차율이 선진국의 세수오차율보다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홍의락 의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기 시작하자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3년에 담뱃세, 2014년입니까? 소득세법 바꾸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상적 정상화, 지하경제의 양성화,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세무행정의 강화 정책을 하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현장에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부총리님은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홍 의원님 말씀처럼 체감하는 데에 좀 미치지 못하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의락 의원** 사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2016년까지…… 2016년도 실적이 경상성장률입니다마는 4.7%가 됩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재부에서는 세수가 증대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도 좋아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았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가가 좀 상승됐다고 하는데 물가도 2015년까지는 그렇게 상승되지도 않았다는 측면에서 유리지갑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근에 세수 증가, 초과세수의 추이를 보면 3대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년 같은 경우에 각각 3개 세목에서 늘어난 돈이 한 이십이삼조 되거든요, 전체가 한 24조 되는데. 세목이 각각 7조에서 8조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인……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1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절대액으로. 또 자산거래 때문에 나오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세감면을 꾸준히 추진해 온 효과도 있었고, 아주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말씀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전체 세금고지액 중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것은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작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 시중에서는 박근혜정부 붕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기인했지만 사실은 이런 유리지갑을 건드렸기 때문에 촛불이 저렇게 활활 타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의락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홍의락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장관님,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을 만들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홍의락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수립 당시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 그리고 수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 흐름이 탈원전과 탈석탄 쪽으로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는 다르게 에너지의 모든 시장이 5년 단위로 할 때는 에너지 전체의 흐름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세계가 지금 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에서 보면 200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만 GDP를 3.7%로 계산했고 2차는 2011년부터 2035년까지 2.8%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계획은 전기 소비, 그러니까 BAU지요, 실제 미래 수요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0월 달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41%의 원전 비율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보면 20%대로 해서 29%까지 갔습니다마는 원전을 7기 내지 10기를 더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국민을 기만한 기본계획입니다. 이 에너지기본계획을 건드리지 않고 8차 수급계획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논쟁이 일어나고 신고리 5·6호기의 문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차 수급계획도 해야 되지만,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을 1년 뒤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빨리 수정을 가해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력수급계획이 2년마다 지금 수립되고 그리고 에너지기본계획법이 5년마다 되는 그 시차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컨플릭트(conflict)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시장은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3차 에너지기본계획법을 수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조금 전에 제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세무행정을 강화해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기 소비를 조장해서 과도한 원전 건설을 시작했고 그래서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산업에 악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성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의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호남과 영남이 서로 홀대받는다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방에서는 흔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의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갈등이나 낭패감 열패감 같은 것을 안기는 경우도 있어서요.

○홍의락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큰일나겠다, 물론 제가 대구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문제로, 옛날에는 영·호남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에 걸리면 영·호남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수도권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영·호남을 같은 틀로 보고 남부권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부가 대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사회에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영·호남 갈등을 보면 ‘이웃집에서 왜 저럴까’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

습니다. 우리는 크게 볼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좁은 곳이고요.

우리 의원님 발언시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보태자면 이번 달에 경상북도 구미에 ‘전남도민의 숲’이 문을 엽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목포에 ‘경북도민의 숲’이 문을 열거든요. 동시에 한 2주 정도 차이를 두고 문을 열게 되는데 김관용 경북지사님과 제가 전남지사로 일할 적에 함께 했던 상생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지역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함께 뭔가를 도모해 가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의락 의원 대구와 광주의 내륙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남부권 경제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 경제로서 일극체제가니까 국가운영 체계를 이렇게 두 축으로 보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영·호남에 갈등이 안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의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구 취수원 문제입니다. 총리님, 오래된 문제니까 잘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홍의락 의원 지난번 8월 24일 날 제가 대구·경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당 조직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처음으로 구미시와 대구시 민관협의체 또 국토부·환경부 관련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얘기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만들고도 한자리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였고 또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주관하셔서 이해당사자들이 한데—저도 물론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는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이제까지 구미시가 중앙정부의 관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으로만 알고 접을 먹고 있습니다만 홍 의원님께서 이미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니 좋은 시기를 만들어서 구

미시와 대구시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홍의락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미시민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접근하면 모든 것이 오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참 고마운 일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덕분에 쉽게 쉽게 풀려 가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도 그중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의락 의원** 새롭게 접근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알겠습니다.

○**홍의락 의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홍의락 의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성장·저고용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우리 모두가 작동되지 않는 고도성장 시대의 논리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홍의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부산 연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하고 하루 전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는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은 많은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후로도 6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에는 월성과 고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 사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조작 실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 외부의 공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미래 에너지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높은 원전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평균 의존도가 18%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30%이고요. 전 세계 평균은 10% 수준입니다. 원전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 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 반경 30km 안에 무려 380만 명이 살고 계시고 바로 거기서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도 5.8의 우리 역사상 최강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개발해 가야겠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일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격하고 급진적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원전이 없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의 계획대로 중간에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육십이삼 년이 걸려서 2080년에나 원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김해영 의원**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그 수명까지 운영하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면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도 또 국토가 좁기 때문에 면적당 원전 기수로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가 우리가 저장능력의, 그것도 임시저장 상태입니다마는 거의 80%선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원전을 계속 밀집해 갈 수가 없는 상태로 몰려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가동 중인 우리나라의 원전 24기는 10만 km²당 24.7기입니다. 일본의 11.5기, 미국의 1.1기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입니다.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km 내 거주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리원전 인근에는 382만 명입니다. 만약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이 382만 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인근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원전을 지을 때 상정했던 지진의 강도 그것보다는 점점 더 높은 지진이 생겨나고 있다. 한도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상정했던 것보다는 더 센 지진들이 오고 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만약에 작은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만약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어느 정도 예측되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상상하기 싫을 만큼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김해영 의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현황,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 1만 5000t 정도가 있습

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작년에 발표가 되었고 법안도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임시저장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현재 1만 5000t,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요. 처리 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디에 지어야 할 것인가는 아직 더더군다나, 오리무중이라고 그러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김해영 의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0만 년의 격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영구처분을 위한 시설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에 대한 대안도 없이 원전을 더 짓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산업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원전의 발전비용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폐기물 처리비용, 잠재적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반영은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사회적 갈등비용이라든지 환경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화면 봐 주십시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자료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전망입니다. 원전은 2020년대에 MW당 미국 99달러, 영국 95파운드로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원가가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장관님, 미국과 영국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산출결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진행하면서 9월 18일 주에 전력원가기준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회계, 법

를 그리고 관련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가를 산출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11월 달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의원** 그렇게 도출된 균등화 발전단가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요금의 인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에너지 전환을 놓고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 폭탄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기요금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2년도에 예비율이 최고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전력 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해영 의원**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에너지정책에서는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해영 의원**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력 대란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력 대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을 예측해야 되지만 대략적인 산술법에 의해서도 25년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25년 이후에 한 9~10GW 정도의 설비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재생이라든지 LNG 발전설비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현재 전력 피크 시에도 28GW 가량의 여유 설비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영 의원** 그럼에도 최근까지 신규 원전의 건설이 계획된 이유가 뭐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든지 탈석탄에 기초한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은 환경하고 안전한 문

제를 떠나 오히려 에너지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조만간 원전의 발전원가가 굉장히 비싸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EIA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원전 발전원가가 최고로 비싸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세계적인 흐름을 지난 정부에서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심야전력과 같은 경부하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금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적은 부담으로 전력을 과소비하는 특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하 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에 대한 산출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부하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의 피해,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의원님 지적이…… 예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최고의 문제점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CBM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수요를 예측하고 각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처의 에너지 수요량을 클라우드서비스로 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로 다시 분석해서 최적의 상태로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기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 에너지에 산업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고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엑슬론 회사입니다. 엑슬론의 전 CEO께서 ‘원전이 싸다라는 것은 농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업자들이 오히려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지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전의 비용 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말은 했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자리걸음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꼭 성공적이라라는 보장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올리겠다’ 이른바 3020 계획을,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도 산업부장관께 ‘그 목표 달성 낙관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하다못해 3020, ‘2030년까지 20% 달성’이라는 목표라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영 의원** 좋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최소 60년은 원전을 운영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만큼 기존 원전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 격납철관의 부식, 콘크리트 공동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건설 당시인 20년 전에 분실된 망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격납 건물 내의 철관과 콘크리트는 사고 발생

시에 방사성물질을 가둬 두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문제가 확인된 한빛 1·2·4호기, 고리 3호기, 한울 1호기 외에도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납 건물 내 철관, 콘크리트 전수조사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20년 전 공사할 때 잃어버렸던 망치가 이제사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데요 만약 부실공사가 발견된다면 법대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만약 부실시공이 발견된다면 시공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원전 안전 책임져 주십시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영 의원**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은 뒤로 미루고 값싼 발전단가를 최우선으로 해 왔습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여력이 없었던 개발도상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발전단가는 낮아졌고 이제 원전과의 역전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에너지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로 나아가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재석 의원님들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20분 정도 걸릴 테니까 지금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 출신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8위에서 18위로 밀려났고 제조업 가동률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장바구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올랐고 청년일자리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한미 FTA 개정 움직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대외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컨트롤타워 실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구조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고 강성노조와 시민단체에 휘둘린 포퓰리즘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보 무능에 이은 경제 무능까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추경호 의원 부총리와 저는 연수원 동기요 함께 공직을 시작해 30여 년을 같은 직장에서 일해 온 동료로서 제가 존경하는 경제관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경제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쓴소리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추경호 의원 부총리께서는 과거에 건전재정, 균형재정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의 방향입니다.

○추경호 의원 그때 생각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늘 갖고 있는 소신은 돈을 재정에서 써야 할 때, 예를 들면 경제위기가 왔든지 또는 우리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혁신을 위해서 돈을 써야겠다는 커밋먼트(commitment)가 있을 때는 돈을 써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공간을 채우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추경호 의원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2년 초 당시 기획재정부차관 시절에 ‘정치권이 쏟아 낸 복지공약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재앙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재원 조달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증세 방안은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다’라는 비판을 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기억합니다.

○추경호 의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신 부총리는 문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공약 실행과 증세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왜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생각을 바꿨다는 것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은 써야 될 데에는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건전성을 유지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라든지 또는 2008년 경제위기 때나 또는 우리 경제의 구조나 사회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커밋먼트(commitment)가 있다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람 중심 일자리 또는 혁신 성장을 하면서 재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나 5년 동안의 중기재정에서는 건전성을 같이 바탕에 두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의원 제가 보기에, 2012년과 지금 경제상황에 그렇게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썬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지 문제나 또는 복지정책을 쓰더라도 어떤 복지철학과 어떤 복지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잠재성장을 끌어올리는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때 제가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적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한, 그것은 어느 특정 정당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복지공약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콘텐츠에 있어서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제가 조금 이따 지적하겠습니다.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이키기가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 최근 복지제도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 이후까지 중장기 재정건전성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는 그렇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전광판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최근 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예정처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개 사업만 추가해서 최근에 다시 수정 전망한 자료입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기존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국가채무 그래프로써 현재 GDP 대비 약 40%에서 2060년에는 152%로 높아 집니다.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조세 수입은 줄고 지출 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 정부의 4개 사업만 추가하더라도 2060년 국가채무는 무려 42%p나 증가하여 200% 가까이 급등합니다. 사실상 재정 파탄입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인 40%로 유지할 경우에는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4개 사업만 추가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을 보면 2060년에는 지금보다 16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7세인 사회초년생이 약 20년 후인 50세가 되면 지금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의 7배를, 현재 고등학생은 약 30년 후에 아빠 세대보다 11배를 더 내야 합니다.

이런데도 지금 세금 퍼 주는 정책을 추가 확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예정처에서도 좋은 자료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는데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처에서 이 자료를 내면서 썼던 전제조건이 문제인데요. 몇 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경상성장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작년에 예정처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세수 상황이 고려가 덜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16조~17조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이 되고 그와 같은 16조~17조의 세수 증대가 앞으로 해마다 베이스업(base up) 되면서 들어오는 돈이 새 정부 임기 내에서만 해도 적게는 60조에서 많게는 8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들을 같이 감안을 한다면, 예정처에서 작년에 냈을 때는 좋은 자료를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금 교정을 해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국가채무 비율 말씀을 하셨는데, 40%를 전제 하셨는데 늘 국가채무 비율을 볼 적에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정부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출 증가에 의한 채무의 절대액 증가뿐만 아니라 함께 늘어나는 GDP 증가율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경상성장을 예컨대 당분간 4% 초반 보고 그 이후에 봤을 때 분모인 GDP가 늘어나는 속도 또 정부의 정책이 잘됐을 적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분자뿐만 아니라 분모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같이 본다면 예정처 자료에 대해서 좋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재정 당국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수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잘 살펴보십시오. 인구증가율 전망도 지금보다 훨씬 제너러스(generous)하게 되어 있고 잠재성장률도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더 높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정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세히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좋은 토론거리일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 2012년 7월 기재부차관 시절에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 주는 게 공정한 사회냐'라고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자꾸 그때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수당 문제는 여러 가지 논리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도입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20개국 중에서 90개국이 보편적으로 주고 있고 한 30개국이 소득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경제에 주는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봤을 적에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추경호 의원** 부총리, 그 논리는 보육비하고도 똑같습니다. 보육비 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동수당은 왜 다른 논리로 이야기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 딱 하나만 예를 드시니까 그렇게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전 몇 년도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연도……

○**추경호 의원** 2012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2년인가요? 그러면 5년 전인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내용 또는 그 콘텐츠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내용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사업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조금 미스리딩(misreading) 하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호 의원**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외팔이 경제학자 없나', '경제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 그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균형재정 상태를 넘겨줬습니다. 아까 세수초과 말씀하셨지요? 균형재정 상태를 넘겨줬는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나라 곳간을 털어 빚잔치를 벌이면서 재정 위기의 씨앗을 잔뜩 뿌려 놓고 떠나려는 소위 먹튀 정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권은 그렇더라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총리는 이제라도 공무원 증원과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정부 때는 균형재정을 했고 새 정부 때는 먹튀 한다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수지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최근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추경호 의원** 부총리, 5년간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복지제도는 한번 들어오면 30년, 50년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다음 정부의 재정 운용의 폭이,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면 그 답을 드리면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두에 정부가 사람 중심, 사람 투자에 재정의 역점을 두면서 경제와 사회구조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면 얼마큼 우리가 잘 써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먹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오히려 관리대상수지를 작년 말보다, 금년 말보다 더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가채무 비율도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0.1%p 개선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이렇게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다만 정부 내 5년 동안을 보면 금년보다는 다소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하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부총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정처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 한국은행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건 좋은 토론거리인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추경호 의원 부총리, 다른 기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총리, 사람 중심 경제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도대체 사람 중심 경제가 뭐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의 틀은 공정경제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사람 중심 또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고……

○추경호 의원 왜 '사람 중심'이라는 이름이 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야말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이제까지의 정부의 또는 우리 경제의 경제 패러다임이 물적 성장, 양적 투자에 치중을 해 와서 개발연대에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의 변화나 여건의 변화가 물적 투자,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 또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이런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소득분배 개선도 포함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물론입니다.

○추경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들은 사람 중심 경제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람에 중심을 뒀었지요. 그렇지만……

○추경호 의원 차별화가 된 것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양적으로 보다 사람에 중심을 둔 것도 그렇지만 예컨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SOC 예산 줄인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드린 것이 이제까지의 성장과 경제의 패러다임이라는 그 물적 성장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인데 그 사람 중심이 소득이라든지 또는 양극화에서나 소득재분배 면에 있어서의 해결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노동의 질적 개선 이런 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지요. 과거 정부도……

○추경호 의원 부총리, 지금 부총리 취임하신지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생 30년 이상 하셨습니까. 그때는 사람 경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예산실장 할 때나 기획재정부차관 할 때나 국

무조정실장 할 때도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했고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경호 의원 소득분배 중시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 97년 외환위기 이후 네 번의 정부 중 소득분배가 악화된 정부, 개선된 정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여러 가지 통계를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니계수를 쓸 것인지……

○추경호 의원 지니계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니계수를 썼을 경우에 글썽요, 아마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소득분배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호 의원 전광판을 다시 봐 주십시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서에서 사용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대로라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니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분배가 개선되었으니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 통계 하나 가지고 어느 정부가 소득 개선에 더 업적이 있었느냐 가지고 저는 평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어느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큰 관심도 없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은 어쨌든 간에 과거 한 20여 년 동안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 위기 그 이후에 있었던 전반적인 소득분배 악화나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유동성의 제한, 사회갈등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부도 소득분배에 대해서 악화시키려는 정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패러다임 자체를 저희는 보다 좀 바꿔 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소득 주도 성장의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몇 %, 얼마나 올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도에 16% 올라갑니다.

○추경호 의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상 정도 한번 평가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근 평균에 비해서 9.1%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우려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어떤 이야기들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또 그런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의 감소 이런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왜 이렇게 높은 인상률로 결정이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양극화라든지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 아까 어떤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득분위 1분위의 최근 근로소득에 중심을 둔 소득의 감소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과 노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과 내수 진작 또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개발 이런 측면에서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추경호 의원 감당이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 세금으로 절반 이상 지원하기로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지금 3조 정도를 어려움을 겪으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게 임금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간접 지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카드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아니, 선진국 중에서 세금으로 민간기업 임금 인상 직접 지원한 국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없지는 않아요.

○추경호 의원 직접 지원하는 국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임

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추경호 의원 아니, 세제 지원 이런 것은 우리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하는 국가가 있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우리나라와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세금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사상 최고 폭으로 정책 결정을 하셨는데 후회 없으십니까? 소신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제 소신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우려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과연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정말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부로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조 지원 방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것이 차선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 아니, 세상에 민간기업 임금 인상하면서 정부 세금으로 지원받는다는 전제하에 임금 협상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협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추경호 의원 어떻게 최저임금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기 전에 결정을 한 것이지요.

○추경호 의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요.

○추경호 의원 감당 가능 못 한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 감당 가능하면 세금 지원은 왜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인풋이나 그렇게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16.4%라든지 또 7530원이지요,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정부로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대책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3조 원 세금 내년 한 해만 지원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한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직접 지원에 대한 기간이나 또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밝힌 바처럼 내년에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한시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다만 언제까지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아니, 내년 한 해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제가 한 해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한시 기간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같아서는 내년 정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안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호 의원 아니, 3조 원 지원이 지금 당장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1년짜리 미끼 상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호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기업들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말씀드렸드시피 한시적인 원칙은 갖고 있고 시장에 연착륙은 지켜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그와 같은 지원을 연년세세 항구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의 기간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연착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이지요.

○추경호 의원 전 국민이 듣고 있으니까 부총리님 소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추경호 의원 보도에 보면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세 결정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그런데 며칠 전 또 추미에 여당 대표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유세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세 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문제라든지 조세정책의 전체 방향 또 지금의 부동산 투기 과열은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들 또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추경호 의원 다른 이유로는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다른 이유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추경호 의원 부동산 투기 억제 이외의 목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부에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낸 세법안에 대해서 국회와 잘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이유가 될지를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로……

○추경호 의원 아니, 일부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유세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을 포함한 조세 개편의, 지금 정부가 낸 것 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조세특위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저희 기재부가 주축이 되어서.

○추경호 의원 아니, 부총리 소신을 여쭙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 소신은 그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저희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보유세 인상하지 않느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어떤 이유로든지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추경호 의원 그러면 부동산 투기 아닌 다른 이유로는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지금 두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렇게 흑백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얘기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명목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예단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기재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이런 단계에서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제 입장이자 소신이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예,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는

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제 얘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 그런 말씀을……

○추경호 의원 듣는 저도 헛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혼란할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제가 재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스, 노 하는 얘기를, 특히 세금 문제를 어떤 가정에 의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추경호 의원 지금 부총리의 소신을 여쭙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제 소신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추경호 의원 그러면 또다시 존재감 실종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당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이제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광판을 봐 주십시오.

현 정부 들어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인사 확대, 예산 확대로 지역 주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여론 듣고 계십니까?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듣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인사에서 대구경북 소외되고 있고 또 SOC 예산 삭감, TK 확대되고 있다, 듣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SOC 예산에 관해서는 오늘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지방들이 자기들이 제일 손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방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삭감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인사 홀대, 예산 홀대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책임총리 역할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대구 지역 취수원 이전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경호 의원 지금 총리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 지자체장을 모시고 아무 전제조건 없이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싶습니다.

○추경호 의원 좋습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나서서 가지고 관계 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얼마 전 대통령께서 영혼 있는 공직자 되라고 했는데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공직자들을 도구라고 지칭하신 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추경호 의원 도구에 영혼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성경에서 흔히 도구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국정과제에 그만큼 충실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추경호 의원 그러면 공직자는 도구라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조금 더 자세히 공직자의 이해를 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말씀의 뜻은 우리의 국정과제 또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 공직자가 거기에 봉사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추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경제 구조개혁 정책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부총리의 구조개혁 시급성, 철학, 방향성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우리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든 제가 저희 부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마는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 혁신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 요인인 저출산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시급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

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여기에 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3개에 대해서요?

노동 쪽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측면에서 제가 늘 세 가지 틀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적 자원 확충·고도화 플러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개혁 부분은 아까도 어떤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인력 재배치나 공공부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저희 기재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개혁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대학총장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교육개혁에 대한 시도를 현장에서 많이 해 보았습니다, 물론 단위학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육개혁에 대해서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부총리 계시니까 제가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신축성 문제는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그러기에 앞서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신축성 얘기를 할 적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가기 전까지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 수준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포함 또는 전직훈련, 그래서 그와 같은 대타협을 지금 단계에서 이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노동시장의 안정

성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노사 간에 또는 우리 노동시장 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제가 들어 보면 당분간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도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시간이니까요.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노동시장의 신축성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은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보장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 생각을 달리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묻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추경호 의원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재정 위기를 초래하거나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후대까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시한부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박수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또 공부도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77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용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운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중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개의 시 재석 의원(109인)

강병원	곽대훈	권미혁	김경협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찬	金成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춘	김용태
김정우	김종민	김중석	김중훈
김중로	김진태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민경욱	박경미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병석	박성중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송옥주	신경민	신보라	신용현
심재권	양승조	엄용수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유동수
유민봉	유승민	유승희	유재중
윤관석	윤영일	윤종오	이개호
이만희	이수혁	이우현	이원욱
이재정	이정현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회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성호
정세균	정유섭	정인화	정춘숙
정태옥	조경태	조훈현	채이배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표창원	홍영표	홍익표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82인)

강길부	고용진	곽대훈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도읍	김민기
김병관	김삼화	김상희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영진
김영춘	김정재	김중석	김중로
김해영	김현미	남인순	노응래
문진국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손혜원
송기석	송석준	송옥주	송희경
신보라	신용현	안상수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영훈
오제세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유재중	윤관석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이동섭	이만희	이수혁	이용주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철규	이학영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임종성	전희경	정갑윤
정세균	정용기	조승래	진선미
최경환(국)	최도자	최연혜	표창원
함진규	홍의락		

○청가 의원(14인)

김경수	김관영	김광수	김영주
김중회	민홍철	박순자	백승주
윤상현	이정미	이철우	조배숙
주광덕	최경환(한)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우윤근
입법차장	진정구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출석 정부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관직무대리)	최수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금 용 위 원 장 최 종 구
【보고사항】

○의안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송영길·김민기·김영호·김철민·박정·박주민·손혜원·정성호·조승래·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송영길·김민기·김영호·김철민·박정·박주민·손혜원·정성호·조승래·조정식·주승용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최명길·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경진·정동영·주승용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순례·윤종필·강석진·김승희·김성원·정갑윤·임이자·김명연·윤영석·신상진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중희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중희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중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송기석·이태규·정인화·최명길·신용현·채이배·유성엽·박주현·김성식·윤영일·최경환(국)·이동섭·최도자·김관영·이용주·이용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중희 의원 발의)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양승조·김혜영·정춘숙·정성호·천정배·안호영·김정우·손혜원·박주민·이용주 의원 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중희 의원 발의)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중희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김수민·전혜숙·정동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수민·정동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천정배·노웅래·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수민·정동영·주승용·김경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이동섭·조배숙·신용현·김중로·이용주·권은희·장정숙·이태규·정인화·윤영일·최명길·주승용·최도자·최경환(국)·이철규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중희 의원 발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 · 이찬열 · 박정 ·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전해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 · 이찬열 · 박정 ·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전해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 · 이찬열 · 박정 ·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전해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송기현 · 김정우 · 김철민 · 유동수 · 윤관석 · 홍의락 · 박정 · 심기준 · 노웅래 · 박주민 · 신창현 의원 발의)

농어업 ·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위성곤 · 이개호 · 김현권 · 이찬열 · 어기구 · 김성수 · 강창일 · 이용득 · 이학영 · 김해영 · 김병관 의원 발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 · 이찬열 · 박정 ·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전해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의원 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재정 · 정춘숙 · 정성호 · 백혜련 · 조승래 · 금태섭 · 윤관석 · 김정우 · 박주민 · 노웅래 · 신창현 의원 발의)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황주홍 · 이찬열 · 박정 ·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전해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의원 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 · 이찬열 · 박정 ·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전해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의원 발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 · 이찬열 · 박정 · 김관영 ·

이동섭 · 최도자 · 전해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희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박준영 · 박주현 · 이용주 · 김종희 · 김삼화 · 황주홍 · 김중로 · 윤영일 · 이동섭 · 정인화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홍의락 · 정춘숙 · 소병훈 · 윤관석 · 송옥주 · 민홍철 · 채이배 · 강창일 · 유동수 · 표창원 · 김현권 · 박병석 · 김정우 · 서영교 · 조정식 · 유은혜 · 권미혁 · 김철민 의원 발의)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정진석 · 이종배 · 경대수 · 권성동 · 이철우 · 박명재 · 박인숙 · 박덕흠 · 이완영 · 원유철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2. 김상훈 · 강석진 · 이완영 · 김명연 · 윤재옥 · 주호영 · 김승희 · 추경호 · 김순례 · 정대옥 · 함진규 · 광대훈 · 윤종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명연 · 강석진 · 김상훈 · 김승희 · 양승조 · 정재호 · 전해숙 · 황영철 · 김성원 · 김순례 · 최도자 · 신상진 · 천정배 · 오제세 · 전재수 · 전해철 · 윤소하 · 김도읍 · 홍문중 · 김정재 · 김진표 · 정춘숙 · 민경욱 · 주광덕 · 서영교 · 김성태 · 임이자 · 박완수 · 김광수 · 정갑윤 · 박명재 · 박덕흠 · 나경원 · 김두관 의원 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개호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중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운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이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민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용천 · 조정식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언주 · 최명길 · 김수민 · 송기석 · 김중로 · 이동섭 · 박준영 · 정동영 · 이용주 · 윤영일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용호 · 노용래 · 유성엽 · 박주선 · 김관영 · 장병완 · 최명길 · 윤영일 · 김정우 · 박지원 · 박준영 · 주승용 · 장정숙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완영 · 이우현 · 김진태 · 강석진 · 김명연 · 곽대훈 · 함진규 · 이종배 · 김태흠 · 김정재 · 김상훈 · 신상진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한정 · 어기구 · 이수혁 · 송기현 · 민병두 · 최운열 · 심기준 · 유승희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이석현 · 김철민 · 윤후덕 · 설훈 · 김두관 · 이훈 · 임종성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현권 · 위성곤 · 안호영 · 홍문표 · 김석기 · 이개호 · 김철민 · 정인화 · 박정 · 윤영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수민 · 신용현 · 김중로 · 박주민 · 김중희 · 남인순 · 황주홍 · 이언주 · 정인화 · 김삼화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신창현 · 김민기 · 김상희 · 남인순 · 문희상 · 이수혁 · 이용득 · 이훈 · 임종성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정춘숙 · 양승조 · 김영호 · 조승래 · 박재호 · 김종민 · 박주민 · 신창현 · 김정우 · 박정 · 남인순 · 김성수 · 신경민 · 박남춘 · 김경진 · 유은혜 · 김현권 · 이철희 · 권미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추경호 · 정우택 · 김광림 · 김선동 · 심재철 · 유민봉 · 김승희 · 민경욱 · 김종석 · 박덕흠 · 김상훈 · 김정재 · 엄용수 · 정태욱 · 송희경 · 김기선 · 최교일 · 강석진 · 정종섭 · 이만희 · 이양수 · 백승주 · 이종명 · 이현재 · 박명재 · 송석준 · 성일종 · 김순례 · 김성원 · 신보라 · 함진규 · 이장우 · 윤상직 · 경대수 · 최연혜 · 金成泰 · 김태흠 · 박맹우 · 김석기 · 이진복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언주 · 김중로 · 송기석 · 최도자 · 이동섭 · 최명길 · 정동영 · 이용주 · 윤영일 · 김중희 · 박준영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한정 · 이개호 · 김중희 · 윤관석 · 위성곤 · 정재호 · 이훈 · 설훈 · 주승용 · 유성엽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추경호 · 엄용수 · 김정재 · 정태욱 · 송희경 · 김기선 · 최교일 · 유민봉 · 김승희 · 민경욱 · 김종석 · 정우택 · 박덕흠 · 김광림 · 김상훈 · 송석준 · 성일종 · 김순례 · 김성원 · 신보라 · 함진규 · 이장우 · 윤상직 · 강석진 · 정종섭 · 이만희 · 이양수 · 백승주 · 이종명 · 이진복 · 박명재 · 이현재 · 경대수 · 최연혜 · 金成泰 · 김태흠 · 박맹우 · 김석기 · 김선동 · 심재철 의원 발의)

이상 4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9. 6. 김한정·표창원·위성곤·이훈·어기구·송기현·최운열·윤후덕·설훈·이석현·신창현·유승희·이수혁·민병두·김두관·임종성·김철민·박재호·심기준 의원 발의)

9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대한 진상규명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7. 9. 12. 정우택 의원 외 104인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보훈처 보훈행정에 관한 질문서

(2017. 9. 12. 홍영표 의원 제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제한업종에 관한 질문서

(2017. 9. 12. 최운열 의원 제출)